

EAI 워킹페이퍼

2022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강원택(서울대학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글에서 우리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대한 이슈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우선 주요 두 정당의 후보가 모두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초단체장인 성남시장과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중앙 정치 경험이 없고 국회의원도 거치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 경험만 있을 뿐 정치 관련 이력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두 후보 모두 이전의 후보들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갖지 못했다. 이런 특성은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했던 김영삼,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386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노무현, 박정희 세대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그리고 친노 지지층에 의존한 문재인과 다른 경우이다. 이로 인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약한 만큼 두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이슈 등 외부 요인의 영향에 따라 변동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선거 이슈와 관련해서도 20대 대통령 선거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은 ‘대표 상품’이라고 할 만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 운영의 기본이 될 정책 방향이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논의는 선거 기간 중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른바 ‘7, 4, 7’, 즉 매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경제 7위 국가를 약속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를 공약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탄핵 이후의 상황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치 권력, 권력기관 개혁’을 공약했다¹⁾. 이와 비교할 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거대 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놀이터 신설, 동네 지하주차장 건설, 둘레길, 급식소, 펫 공원 등 ‘동네 공약’이 남발했고 이로 인해 ‘구의원 선거 같은 대선’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²⁾ 또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1) 당시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제 ‘일자리 확대’였고 두 번째가 ‘정치권력,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2) “‘놀이터 신설’... 구의원 선거 같은 대선”(조선일보 2022. 1.25.)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1/25/PKXMGXHD6RADD05QT3U6HQ6L3Q/>

재직 중 이뤄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이나 윤석열 후보의 ‘무속(巫俗) 논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비리 등 두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과 자질, 비리 연루 의혹이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가 향후 5년의 국가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이어지면서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투표로 드러난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어졌다. 후보들의 담론과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 양당 후보는 비슷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야당 후보의 젠더 갈라치기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졌다. 야권 단일화로 선거 판세는 끝까지 혼전을 거듭했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출발부터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여야는 대선을 하루 앞둔 8일에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서로 “몸통”으로 지목했다.³⁾

그런데 이슈와 관련해서 볼 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9월 말에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잘못하고 있다’고 합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높았다. 무당층 중에서는 75%,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97%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⁴⁾ 이런 분위기로 여야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아파트 공급 확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2022년 1월 실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8%가 대통령 선거 때 ‘부동산 및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⁵⁾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후보자가 ‘주도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거대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차기 정부를 이끌 후보에 대한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이다. 앞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당파적 지지와 무관하게 매우 높았던 반면, 유권자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비리 의혹

3) “정책 실종 · 여성 혐오... ‘비호감’ 대선에도 사전투표를 신기록: 20대 대선이 남긴 것.” (경향신문 2022.3.8.)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3082205005>

4)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466호 (2021년 9월 5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41>

5) “LIVE ISSUE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①부동산 ②일자리 ③경제성장 정책 따져서 대통령 뽑겠다” (한국일보 2022.1.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215080000998>

등 네거티브 요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부재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로 두 후보 간 득표율의 차이가 0.73%에 불과한 대단한 접전이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이슈가 여론조사에서의 반응과 다르게, 투표 결정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정파적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이슈가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적 투표로 이어졌는지, 부동산 정책이 투표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면 어떤 특성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선거는 전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기회이자 향후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담당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자의 의미가 강조되면 투표 결정은 회고적 평가의 의미가 강해지고, 후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 전망적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차기 정부 운영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고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키(Key, Jr. 1966)가 지적한 대로, 회고적 평가를 통해 집권 세력이 잘했다면 계속 지지함으로써 상을 주는 것이고, 못했다면 다른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벌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는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이 구현되게 해 주는 민주주의 핵심 기제이다. 다만 피오리나(Fiorina 1981)가 지적한 대로, 회고적 평가를 그동안 특정 정당이 이끈 정부의 업무 성과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총합(running tally)으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단기적 평가가 갖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회고적 평가는 정당 일체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정책 결과나 업적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파적 편향이라는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로 이뤄질 수 있다. 즉 사회적 정체성이나 정파적 충성심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정파적 충성심에 동조하는 형태로 맞추는 것이다(Achen and Bartels 2016).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러한 정보를 애당초 받아들이지 않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이전의 부정적 정보를 상쇄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왜곡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자기에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Lodge and Hamill 1986; Redlawsk 2002). 정파적 지지로 인해 이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지지하는 후보의 입장으로 투사(projection)하거나 그 입장으로 자신의 선호를 바꾸는

일(persuasion)과 같은 합리화(rationalization)도 생겨날 수 있다(Brody and Page 1972). 한국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길정아, 강원택 2020).

한편, 경제 투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제 상태와 관련된 가계부 투표(pocketbook voting)와 국가 경제 상황과 관련된 사회 공동체 투표(sociotropic voting)의 영향을 구분한다. 사회 공동체 투표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지만(Kinder and Kiewiet 1981; Kiewiet and Rivers 1984; Hansford and Gomez 2015). 영국(Clarke et al., 2000)이나 덴마크(Nannestad and Paldam 1997)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른 가계부 투표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에서는 객관적 경제지표와 집권당 후보 득표 간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거나 (문우진 2018), 개인의 경제 사정에 대한 회고적 고려보다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고려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박경산 1993; 이현우 1998; 황아란 2000; 이재철 2008).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슈의 현저성(salience)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국 선거의 경험을 보면, 이슈 중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슈보다 투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집권당 후보 지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야당 후보 지지로 이어지는 상벌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경제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낙태 이슈처럼 현저성이 높은 이슈라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ramowitz 1995). 그런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현저성이 높은 이슈였으며,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쉬운(easy) 이슈 (Carmines and Stimson 1980)였다. 이와 비교할 만한 유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선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았고, 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 이내영과 정한울(2007)은 2004년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투표 비교 분석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지지 철회는 경제적 불만 즉 개인 경제 상태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실적 평가와 경제실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치적 효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

3. 선거 이슈 분석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전반을 지배한 대형 이슈는 없었지만 다양한 사안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선거 운동 기간 중 주목을 받은 이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나 부인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것이 많았고,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 정책 관련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대응처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선거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타났다. 31.1%의 응답자가 제1 순위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으며, 1, 2 순위 응답을 합친 비율도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전체의 40%에 가까운 유권자에게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

이슈	1순위	2순위	1, 2 순위 합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31.1	7.8	38.9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주가조작 논란	14.2	12.1	26.4
대장동 특혜 의혹	9.8	14.4	24.2
이재명 도덕성 논란 (형수 욕설 등)	9.4	11.8	21.2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11.5	7.1	18.6
윤석열 무속 논란	5.5	9.9	15.3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5.5	6.8	12.3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유용 논란	2.1	8.0	10.1
정부 코로나 재난 지원 정책	3.8	4.5	8.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0.8	3.2	3.9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0.4	2.0	2.3
기타	3.4	3.4	6.8

그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이슈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슈들이었다. 제1 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 부인의 허위경력, 주가조작 논란’이 14.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1, 2 순위 응답을 합한 비율도 2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 2 순위 합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었는데, 1 순위는 9.8%였지만 2 순위 응답은 14.4%로 합해서 24.2%였다. 부동산 이슈 다음으로는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관련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한 응답률 합계 10.1%와 형수 욕설 등 이재명 후보 자신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응답률 21.2%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 논란은 55.5%가 된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와 생겨난 무속 논란을 선택한 1, 2 순위 응답의 합 15.3%를 더하면 윤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의 비율은 41.7%로 높아진다.

결국 두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투표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산 비율에서 보듯이 도덕성 이슈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표 2]에서 보듯이 이재명 투표자 중에서 후보의 도덕성을 보고 찍었다는 응답은 1.4%에 그쳐, 20.2%의 윤석열의 경우와 큰 대조를 보였다.

[표 2] 무엇을 보고 후보에게 투표했나(%)

	후보 소속 정당	후보 능력, 경력	후보 도덕성	후보 이념	후보 공약	후보 당선 가능성	출신 지역	기타	모름/ 무응답	n
이재명	5.9	63.1	1.4	4.5	12.2	5.1	0.0	7.5	0.4	493
윤석열	15.2	13.7	20.2	11.0	14.6	8.9	0.4	15.6	0.4	526
전체	10.5	36.6	11.4	8.1	14.1	6.9	0.2	11.9	0.4	1,050

[표 2]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응답이 5.9%에 그쳤고, 후보의 능력과 경력이라는 개인적 요소를 중시했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투표자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응답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 투표자들이 정당 요인보다 후보자 요인을 선택 이유로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간의 차별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투표 이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정책적 무능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실패로 인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지지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은 선거 기간 중 집값 잡거나 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고 내세웠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친문재인 계 주류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⁶⁾

한편, 윤석열 투표자 가운데 후보의 도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20.2%로 이재명 지지자의 1.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윤석열이 도덕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했다기보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윤석열을 보다 선호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선거 막판에 이뤄진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1, 2 순위 응답 18.6%로 부동산이나 도덕성 논란 이슈에 비해 높지 않았다.

6) "LIVE ISSUE 여야 대권 레이스 가열 "文과 더 갈라설 수밖에"... 이재명 측 '차별화 시즌 2' 만지작." (한국일보 2022.1.2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316460000030>

대선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 관련 이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투표 결정에 사실상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과거 선거 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른바 ‘북풍’으로 유권자에 영향을 미쳤던 것(정준표 1998; 김형준 2007)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1 순위 응답은 불과 0.4%에 그쳤고 1, 2 순위를 합쳐도 2.3%였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응답의 합계가 3.9%로 북한 미사일 발사보다 높았다. 최근에 가까울수록 선거에서 북한 변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보이는데(강원택 2020: 15),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영향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1순위 기준)

이슈	서울	인천/경기	충청	전라	TK	PK	강원/제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35.7	29.4	37.2	16.5	33.2	32.0	33.8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11.0	9.5	12.6	21.5	11.5	9.8	8.1
이재명 네거티브	22.4	22.8	19.3	9.8	29.9	20.7	19.5
윤석열 네거티브	20.3	21.7	15.0	25.1	11.1	18.6	25.8

- 이재명 네거티브: 대장동 특혜 의혹 +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유용 논란 + 이재명 도덕성 논란
- 윤석열 네거티브: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추가조작 논란 + 윤석열 무속 논란

이처럼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는 후보자 도덕성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이슈의 영향은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문제는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곧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⁷⁾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타깃은 서울과 수도권이었지만 세종이나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실제로 [표 3]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응답률도 충청 지역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서울이었다. 하지만 16.5%의 응답을 보인 전라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선거에 영향을 끼친 이슈로 본 응답이 대체로 30% 혹은 그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국적 수준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선거 이슈였다.

7)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은 세종시(47.5%)이며, 그 다음으로 대전(32.2%), 경기(18.5%), 대구(17.9%), 서울(15.4%), 인천(14.8%), 광주(9.5%), 부산(7.8%)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타임스 2021.5.1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1202109932036007&ref=naver

이에 비해 다른 이슈는 지역별로 분명한 편차를 보였다. 이재명 네거티브 이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전라 지역에서 가장 낮았고, 반대로 윤석열 네거티브 이슈는 그 역으로 나타났다. 즉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는 정파적 지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효과 역시 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이재명 후보가 불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라 지역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의 결과는 정파적 지지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이슈가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이슈에 관한 한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주요 이슈와 후보 지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누구에게 투표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이슈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 후보인 윤석열 투표자들에게는 48.5%의 응답이 보여주듯 압도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과 부인의 도덕성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재명 투표자들에게는 윤석열 부인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논란, 윤석열 무속 논란이 영향을 미쳤고 선거 후반 윤-안 단일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유권자가 가진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지지하지 않는 상대 후보의 부정적 특성에 강하게 반응한 때문이기도 하다. 즉, 후보 도덕성 이슈는 그 자체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유권자의 정파적 입장에 따른 후보 호오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4] 주요 이슈와 지지 후보

이슈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13.0	48.5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17.3	5.8
정부 코로나 재난 지원 정책	5.7	1.8
대장동 특혜 의혹	2.5	16.4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유용 논란	0.6	2.9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주가조작 논란	30.3	0.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0.6	0.8
북한 미사일 발사	0.2	0.4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6.1	4.4
윤석열 무속 논란	11.9	0
이재명 도덕성 논란 (형수 욕설 등)	1.4	16.8
기타	5.5	1.7

4. 부동산 이슈의 영향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부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격 폭등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 관련 가격 급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세금을 강화했다.⁸⁾ 따라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는 후보 지지별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중함 여부와 차기 정부 세금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것이다.

[표 5] 종합부동산세 이슈와 투표 후보

	종합부동산세 과중	차기 정부 세금 개혁
이재명	3.86	6.92
윤석열	7.79	7.99
t-test	-20.79 p<0.00	-7.31 p<0.00

- 종합부동산세 과중 0- 전혀 동의 않음, 10- 매우 동의함
- 차기 정부 세금개혁 0-전혀 중요하지 않다, 10- 매우 중요하다

[표 5]에서 보듯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된 세금 이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항목 모두에서 투표 후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세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유권자들일수록 윤석열에게 투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는 응답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자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투표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과중하지 않다고 본 데 비해, 윤석열 투표자들은 상당히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차기 정부 세금 개혁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증세인지 혹은 감세인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도 윤석열 투표자들이었다. 그만큼 윤석열 투표자들이 세금 문제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 역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세금 부과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세금 문제 영향이 크게 나타났지만, [표 4]에서 본대로 윤 후보 지지자 중에서 투표 결정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도 거의 50%에 가까웠다. 그렇

8)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난 것이다.....징벌적 과세는 세금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 (매일경제 2022.2.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33085/>

다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유권자들 중 5년 뒤 선거에서 윤석열로 ‘정파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이들⁹⁾에게 부동산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표 6]에서 보듯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 중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로 정파적 지지를 옮긴 이들에게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확인되었다. 또한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 옮긴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차기 정부에서 세금 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합부동산세가 과거 문재인 투표자 중 일부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

[표 6] 2017년 문재인 지지자 중 2022년 윤석열 지지자의 부동산 이슈 관련 태도

	부동산 정책 실패	차기 정부 세금 개혁	종합부동산세 과중
2017 문재인 → 2022 윤석열	0.45 (140)	7.89 (139)	7.20 (137)
기타	0.30 (937)	7.36 (948)	5.73 (934)
t-test	-3.62 $p<0.00$	-2.49 $p<0.05$	-4.58 $p<0.00$

- 부동산 정책 실패: 1- 후보 결정에 영향 받음, 0-아님
- 종합부동산세 과중: 0- 전혀 동의 않음, 10- 매우 동의함
- 차기 정부 세금 개혁 중요성: 0-전혀 중요 않음, 10-매우 중요함
- () 안은 n

이런 특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 문재인 지지자 중 이탈자만을 대상으로, 부동산-세금 이슈와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규정하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표 7]에서 보듯이 세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문재인 심판 선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3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문재인 심판 선거라는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무려 .709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을 볼 때, 문재인 지지자 중 이탈자에게 부동산 이슈, 특히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상관관계: 부동산-세금 이슈와 문재인 심판 선거 (문재인 이탈자 중)

상관계수	부동산 정책 실패	종합부동산세 과중	차기 정부 세금 개혁
문재인 심판 선거	.387	.709	.273
n	139	137	138

모두 $p<0.01$

9) 데이터 표본 1,104 명 중 2017년 문재인 지지에서 2022년 윤석열 지지로 옮긴 사례는 140명으로 전체의 12.6%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지역별 인식에 주목할 곳은 서울이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⁰⁾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는 응답은 역시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¹⁾ [표 3]과 [표 8]을 함께 고려할 때,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영향이 투표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비율로 올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응답도 높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중함에 대한 응답의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도 높은 편이었지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정적 응답에는 정파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이슈가 투표 결정에 미친 부동산 이슈의 영향은 역시 서울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표 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역별 평가

	종부세 과중하다	n	표준오차
서울	6.40	205	.23854
인천/경기	5.85	335	.20128
대전/세종/충청	5.72	115	.31172
광주/전라	4.49	106	.34408
대구/경북	6.37	105	.32684
부산/울산/경남	6.07	160	.27449
강원/제주	6.58	44	.51068
합계	5.92	1071	.10822
ANOVA	F= 4.258 p<.000		

■ 0- 전혀 동의 않음, 10- 매우 동의함.

그런데 1990년 3당 합당으로 한나라당-민주당의 양당 구도가 형성된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표 9]에서 보듯이 민주당 계 정당 후보가 항상 앞섰다. 유일한 예외는 531만 여 표라는 큰 차이로 승부가 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동영 후보였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계 정당 후보인 윤석열이 50.6%로 이재명의 45.7%에 4.9% 앞섰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의 격차가 불과 0.73%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뒤진 것은 선거 패배에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 것

10) 다음 기사를 참조할 것.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 거주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주택자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10.4~22.6% 정도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서울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이 60.4%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지닌 종부세가 서울에선 1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경기(29.6%) 세종(22.6%) 강원(21.9%) 지역의 1주택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42.2%를 차지했다 ...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올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에서 지난달 12억 1639만 원으로 100% 넘게 올랐다. [서울 종부세 대상 10명 중 6명은 '1주택자'] (한국경제신문 2021.11.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899301>

11) [표 8]에서는 강원/제주도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실제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그와 관련된 부과한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역대 선거에서 서울 지역 주요 양당 후보 득표율

대선 연도	한나라당 계 후보 득표율	민주당 계 후보 득표율
1992	36.4 (김영삼)*	37.7 (김대중)
1997	40.9 (이회창)	44.9 (김대중)*
2002	45.0 (이회창)	51.3 (노무현)*
2007	53.2 (이명박)*	24.5 (정동영)
2012	48.2 (박근혜)*	51.4 (문재인)
2017	20.8 (홍준표)	42.3 (문재인)*
2022	50.6 (윤석열)*	45.7 (이재명)

* 당선자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에 미친 선거 이슈,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에 대해 [표 10]에서와 같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윤석열, 이재명 지지이다. 독립변수로 선거 이슈, 이념, 소득-자산-계층의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속성 등 네 범주를 포함했다. 선거 이슈 범주에는 후보자 도덕성과 부동산 관련 이슈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종합부동산세, 이재명 네거티브, 윤석열 네거티브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은 전체 유권자 중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과세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 정부 평가 간의 상호작용 항을 이슈 범주에 추가했다. 한편, 이념은 기존 선거에서 투표 결정이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이 큰 변수로 확인되었는데(길정아 2019; 박원호 2012; 이내영 2009; 강원택 2005), 여기서는 자기 이념(self-placement)과 응답자가 인식하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의 이념 거리를 각각 변수로 포함했다. 연령 변수 역시 과거 선거에서 정파적 지지의 차이(최준영, 조진만, 2005; 박명호 2009; 강원택, 성예진 2018)를 보였다는 점에서 포함했다. 한편, 성별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¹²⁾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포함되었다. 최근 선거에서 계층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고(김수인, 강원택 2022; 이지은, 강원택 2020) 특히 부동산 이슈나 세금 이슈와 계층이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층 범주를 포함했다. 가구 소득, 자산 규모,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소속 계층 등 세 가지 변수를 이 범주에 포함했다.¹³⁾

12) "젠더, 지역갈등 얼룩진 대선... '세대포위론'과도 결별해야." (서울경제 2022.3.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D4DQQC9>

13) 각 독립변수의 코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정책실패: 1-영향을 받았다. 0-아니다
- 종합부동산세: 0-전혀 과중하지 않다. 10-매우 과중하다
- 이재명 네거티브: 이재명 네거티브: 대장동 특혜 의혹 + 부인 법인카드 유용 논란 + 이재명 도덕성 논란 1-영향을 받았다. 0-아니다
- 윤석열 네거티브: 부인 허위경력 추가조작 논란 + 윤석열 무속 논란. 1-영향 받았다. 0-아니다
- 문재인 평가: 0-매우 좋았음, 100-매우 못했음. (부호를 맞추기 위해 순서를 바꾸었음).
- 자기이념: 0- 매우 진보, 10-매우 보수
- 이념거리: (자기이념 - 이재명/윤석열 이념위치)의 절대값

[표 10]에는 전국과 서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다소의 차이가 확인된다. 로지스틱 분석은 네 개의 모델로 나눠 행했다. 모델 1은 선거 때 제기된 주요한 이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종합부동산세, 이재명, 윤석열 네거티브 등 네 개 변수 모두가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영향을 받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증하게 생각되고, 이재명 네거티브에 영향이 있을수록 윤석열 지지가 높았고, 윤석열 네거티브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이재명 지지로 이어졌다. 그런데 [10-B]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윤석열 네거티브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이재명 네거티브 변수만 통계적인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나 종부세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계수 값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비해 큰 값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모델은 모델 1에 '문재인 정부 업무 평가 x 종합부동산세 과중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것이다. 전국 분석에서나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윤석열 지지의 확률이 높아졌다. 이 변수가 포함되면서 종합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평가가 결합되는 경우에 윤석열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 이념 범주를 추가한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념과 관련된 세 가지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수적일수록, 이재명과 이념 거리가 멀수록, 윤석열과 이념 거리가 짧을수록 윤석열 투표의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투표 선택의 근접 모델(proximity model)의 설명과 잘 맞는 결과이다. 그러나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념 변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념 범주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이재명 네거티브, 그리고 상호작용 항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모델 3에 소득-자산-계층 요인과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델 3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추가한 변수 중에서는 연령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윤석열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추가된 변수 중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호오도 : 0-매우 싫다, 10-매우 좋다
-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11-1000만원 이상
- 자산: 1억원 미만, 9-15억원 이상
- 주관적 계층: 1 상위, 2 중상위, 3 중간 4 중하위 5 하위
- 성별: 남성 1, 여성 0

[표 10]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0-A. 전국]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선거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1.456*	1.114*	1.127*	1.048*
	종합부동산세	.269*	-.083	-.056	-.064
	이재명 네거티브	2.218*	2.032*	2.067*	2.167*
	윤석열 네거티브	-3.445*	-3.348*	-3.029*	-2.993*
	문재인 평가 x 종부세		.005*	.004*	.004**
이념	자기 이념			.142**	.162**
	이재명과 이념거리			.184*	.194*
	윤석열과 이념거리			-.179*	-.171*
계층	가구 소득				-.015
	자산 규모				-.016
	주관적 계층				-.089
성별 연령	연령				.015**
	성별				.080
상수		-2.501*	-2.96*	-2.551*	-2.876*
모형 요약		Nagelkerke R ² = .568 분류 정확 80.6%	Nagelkerke R ² = .654 분류 정확 83.6%	Nagelkerke R ² = .701 분류 정확 86.7%	Nagelkerke R ² = .710 분류 정확 86.5%

[10-B 서울]

서울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5
선거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2.375*	2.355*	2.445*	2.112*
	종합부동산세	.279*	-.105	-.109	-.133
	이재명 네거티브	3.358*	2.992*	2.862*	2.728*
	윤석열 네거티브	-18.984	-18.612	-18.613	-18.959
	문재인 평가 x 종부세		.006*	.004*	.004**
이념	자기 이념			.175	.181
	이재명과 이념거리			.101	.177
	윤석열과 이념거리			-.146	-.138
계층	가구 소득				.061
	자산 규모				.034
	주관적 계층				.258
성별 연령	연령				.024
	성별				-.032
상수		-3.408*	-2.857*	-3.236*	-5.588
모형 요약		Nagelkerke R ² = .666 분류 정확 83.4%	Nagelkerke R ² = .742 분류 정확 88.8%	Nagelkerke R ² = .758 분류 정확 86.5%	Nagelkerke R ² = .760 분류 정확 89.2%

■ 종속변수 윤석열 1, 이재명 0

* p<0.01, ** p<0.05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이념 요인, 연령 효과가 다시 확인되었다. 보수적일수록, 윤석열과의 이념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윤 후보 지지가 높아졌다. 이슈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종부세,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오로지 선거 이슈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비교할 때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 평가와 결합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도 확인되었다. 서울 지역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후보자 네거티브 이슈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만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런 패턴은 네 개의 모델 모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통적으로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온 이념적 입장이나 연령에 따른 정파적 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이슈의 영향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도 이어졌다. [표 10]의 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윤석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가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신뢰나 매력 때문이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와 '여당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고 요약한다.

5. 결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외형상 뚜렷한 이슈가 없는 선거처럼 진행되었다. 과거 대통령 선거처럼 미래지향적 '거대 담론'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요 후보들은 지역별, 집단별 맞춤형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중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후보자 개인이나 부인의 도덕성이나 처신 논란과 관련된 것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회고적 속성의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4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¹⁴⁾ 앞서 본 대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은 지지 정당이나 정파와 무관하게 유권자 사이에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정작 선거 결과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당 일체감이나 양극화된 정파성 등 다른 요인이 불만을 가진 일부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넘어 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고 또 '징벌적으로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야 했던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 이슈는 이념과 같은 요인을 넘어 중요하게 작용했

14) "24번의 대책..."부동산 전사'서 '빵 장관' 오명 안고 물러난 김현미" (중앙일보 2020.1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7795#home>

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2007년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4.9% 뒤처지면서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에서 선거가 국정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구현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치 세력 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왔지만 2022년에는 5년 만에 정권 담당 세력의 교체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권자 요구의 변화를 잘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부 지배 청산, 정권교체, 탈권위와 같은 ‘정치적 속성의 거대 담론’이 선거 경쟁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 그리고 ‘실용’과 같은 경제적이고 생활 정치적 구호가 제시되었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뉴타운 정책’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슈가 제기되었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탄핵 후의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의 부상은 그 이전의 정치적 흐름의 연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정파적 양극화와 격렬한 이념적 대립이 문제인 정부 5년 동안 한국 정치를 특징지었지만, 그 기저에는 이념 지향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정치에 대한 요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잘 드러내 보였다. ■

참고문헌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1(2), 67-93.
- 강원택. 2020. 『한국의 선거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푸른길.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강원택, 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5-240.
- 길정아. 2019. “정부 신뢰와 정부 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의정연구』, 25(2), 103-140.
- 길정아, 강원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당파적 편향.” 『한국정당학회보』 19(4), 101-140.
- 김수인, 강원택. 2022. “자산과 투표 선택 :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1), 187-215.
- 김형준. 2007. “제 16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 10(2), 47-64.
- 문우진. 2018.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평화연구』, 26(2), 5-44.
- 박경산.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7(1), 185-208.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나남, 35-26.
-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2), 42-72.
- 이내영, 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41(1), 31-55.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 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1), 111-135.
- 이지은, 강원택. 2020. “계급 투표의 재구성: 자산과 소득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123-153.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97-150.
- 정준표. 1998.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 변수.” 『한국과 국제정치』 14(1), 111-151.

- 최준영, 조진만. 2005. “지역 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93-212.
- Abramowitz, Alan. 1995. “It's Abortion, Stupid: Policy Vot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s* 57(1), 176-186.
- Achen, Christopher and Larry Bartels. 2016.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solabehere, Stephen and Shanto Iyengar. 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vertisement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Carmines, Edward and James Stimson.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78-91
- Clarke, H., K. Ho, and M. Stewart. 2000. “Major's lesser (not minor) effects: prime ministerial approval and governing party support in Britain since 1979.” *Electoral Studies* 19, 255-274.
- Fiorina, Morris.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nsford, T and B. Gomez. 2015. “Reevaluating the sociotropic economic voting hypothesis.” *Electoral Studies* 39, 15-25.
- [Electoral studies v.39](#) , 2015년, pp.15 - 25
- [Hansford, T.G.](#) [Gomez, B.T.](#)
- Johnson, Paul, Frances Lynchb, and John Geoffrey Walker. 2005. “Income tax and elections in Britain, 1950-2001.” *Electoral Studies* 24, 393-408
- Key, Jr.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Kinder, Donald and Roderick Kiewiet.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129-161.
- Kiewiet, R. and and R. Rivers. 1984. “A Retrospective on Retrospective Voting.” *Political Behavior*, 6(4), 369-393.
- Lewis-Beck, Michael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183-219.
- Lodge, Milton and Ruth Ha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05-519
- Nannestad, P., and Paldam, M., 1997. "From the pocketbook of the welfare man: a pooled cross-section Study of economic voting in Denmark, 1986-92."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 119-136.
- Petrocik, J. R.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3), 825-850.
- Redlawsk, David.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tics* 64(4), 1021-1044.
- Sanders, D., 1996. "Economic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e and the outcome of the next general election." *Political Studies* 44, 203-231.
- Tillman Erik and Baekkwon Park. 2009. "Do Voters Reward and Punish Governments Changes in Income Tax Policy?" *Journal of Elections and Public Opinion*, 19(3), 313-331.
- Wattenberg, Martin and Craig Leonard Brians. 1999. "Negative Campaign Advertising: Demobilizer or Mobiliz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891-899 (9 pages)

■ **저자:** 강원택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 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의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2년 5월 2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979-11-6617-398-1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